



“투표 참여” 해상 퍼포먼스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전남도 카누연맹 소속 선수들과 함께 목포 해양스포츠센터에서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공모로 결정”...통합의대 5개월 만에 백지화

김영록 지사 “의료 체계 완결 등 4대 원칙 아래 공모”
 2026학년도 200명 목표, 규모·시기·방법 등 협의
 통합 의대 반 년도 안돼 포기...새로운 갈등 불씨 우려

전남 지역의 30년 숙원인 의과대학 신설이 동·서부권 통합 의대에 단일의대로 변경되고, 입지 선정에 대해 공신력있는 외부기관 주도로 공모 절차를 밟게 된다.

김영록 지사는 2일 담화문을 통해 “국립 의대 설립을 위해 어느 대학에 설립할지 공모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며 “통합 의대 추진 방안에 대해선 국립 의대 설립 이후 중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와 추진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5월 중대입 전형 발표 등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통합 의대는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범도민추진위 발족, 범도민 결의대회 등 그동안의 노력과 캐나다 노던 온타리오 의대 벤치마킹 등 통합 의대 방식의 신설 추진 배경을 밝힌 뒤 “정부 당국자와의 협의, 5월 대입 전형 발표 등을 두루 고려해 통합 의대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 규모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역거점 국립 의대 수준인 200명으로 신청하고, 2026학년도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정확한 규모와 시기,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의대 설립은 ▲지역 내 의료체계의 완결성 구축 ▲도

민 건강권 확보 ▲지역 상생발전 도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대형컨설팅 업체 위탁 등 4대 원칙을 기조로 공정하고 합리적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심사위원 선정과 평가기준 마련, 공정한 심사와 최종 결정까지 엄격한 절차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어느 기관에서 담당할지 계속 협의중에 있지만 쉽지 않은 과제라서 위탁기관 선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애로사항도 털어놓았다.

마지막으로 “의대 신설은 상생과 화합의 장으로, 추진 과정에서 정도를 넘어서며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는 것은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갈등 자체를 당부한 뒤 “도는 우수 인재들이 전남 의대를 졸업해 전남에서 의사의 꿈을 펼치며 도민의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도록 국립 의과 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의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의견 수렴해서 알려주시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덕수 총리가 “의대가 없는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되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으나 이후 일부 지역에서 ‘단독 의대론’이 제기되면서 큰 줄기의 정책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통합이 아닌 사실상 단독의대 설립이어서 최종 입지 선정 후 동부권과 서부권의 희비가 엇갈려 집단 반발과 최악의 경우 법적 다툼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락가락한 정책에 따른 행정 신뢰도 추락도 불가피하고, 공모 절차와 막대한 재원 조달, 시설·교수진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김 호 기자

여성에 ‘몹쓸짓’ 5·18 계엄군 실상 드러나

5·18 조사위, 계엄군에 의한 강간·성추행 등 사례 확인
 19건 조사해 16건에 대해 ‘실재했다’ 진상규명 결정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일부 계엄군이 광주 시민들을 상대로 자행했던 성범죄의 실상을 조사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를 통해 당시 자행된 강제추행, 강간, 구금·조사 과정에서의 성고문 등 피해 유형과 오늘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정신적인 고통 사례가 구체화됐다.

다만 3년 6개월여 조사 기간 동안 피해 주장 사건 52건을 파악했음에도 피해자 또는 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개인성을 입증하지 못해 피해 사건이 19건으로 축소된 점은 한계로 남았다.

조사위는 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1980년 5월 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어진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성폭행 정황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겼다.

조사는 지난 2018년 피해자 발굴을 계기로 출범한 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피해실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했다.

조사위는 5·18 기간 동안 계엄군 또는 수사기관이 자행한 성범죄 52건을 취합, 이 중 19건을 추려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이에 대한 신빙성 확인차 진행된 정황·의료기록 분석, 가해 부대에 대한 추정 등을 통해 주장을 구체화하고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려 했다.

이 결과 5월 18일 광주부대의 광주 진입 당시 최초의 여성 피해자를 특정해내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계엄군의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해 진상규명해냈다.

조사위가 확인한 23건 피해자의 경우 5월 18일 오전 광주 북구 수창초교 앞에서 계엄군에 의해 강제탈의 등 성추행 수모를 겪었다. 이 피해자는 7공수부대 33대대 한 지역대에 의해 이같은 사건을 겪었다.

당시 해당 부대 지역대장이 시위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일부러 수치심을 일으켜 시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도 포착했다. 아울러 조사위는 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5·18당시 계엄군이 여성에 저지른 최초의 성범죄 피해상징성을 갖는다고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도기 기자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 62.8%...역대 최고

115개국 220개소, 투표자 수 ‘9만2923명’ 기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의 재외선거 투표율이 62.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의 역대 최고치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재외투표는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전세계 115개국(178개 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수는 9만2923명, 최종투표율은 62.8%로 집계됐다.

대륙별 투표자수는 아주 4만7647명(62.8%), 미주 2만6341명(56.5%), 유럽 1만4431명(73.5%), 중동 2904명(74.0%), 아프리카 1600명(79.3%)이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다. 인천공항에서 재외투표수(회송용봉투)를 확인하고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보내져 오는 10일 국내투표와 함께 개표한다.

이번 22대 총선 재외선거 투표율 62.8%는 국회의원 선거 기준 사상 최고치다. 재외투표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도입됐다. 당시 투표율은 45.7%였다. /조선주 기자

광주시청사 ‘열린공간’으로	2면
서울대병원도 비상경계	3면
두달째 3%대 고물가	4면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후보자 정보 확인

info.nec.go.kr


정책·공약 확인

policy.nec.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debates.go.kr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땀방울이 모여 지켜지는 소중한 권리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